

‘중앙은행의 길’ 묻는 70돌 한은… “금융안정·디지털”

중장기 발전전략 ‘BOK 2030’

개인전문성 등 3개 전략방향 설정
정책영역 확대·정책수단 확충 등
비전달성 위한 4대 전략목표 제시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놨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확대하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9일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을 중장기 비전으로 세우고, ‘개인 전문성, 조직 시너지, 유연성’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는 ▲정책영역 확대·정책수단 확충 ▲조사연구 질적 고도화 ▲디지털 혁신 적극 추진 ▲단계적 경영인사 혁신을 제시했다.

우선 한은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체계

비전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전략방향	Agility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Collaboration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Expertise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전략목표	정책영역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	단계적 경영인사 혁신
전략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 추진 2. 금융안정 역할 강화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연구 및 준비 4. 경제통계서비스 고도화 5.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조사연구위원회 설치 7. 특별연구위원회 신설 8. 경제연구원 역할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디지털혁신실 신설 10. 최고디지털혁신 책임자 임명 11. 업무프로세스 및 환경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순환근무 제도의 단계적 운영 13. 평가보상 체계 개선 14. 의사결정구조 효율화 15. 간강한 조직문화 확산 16.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자료/한국은행

핵심 분야의 정책역량을 확충하고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 모색, 정책영역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안정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책수단을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안정 정책수단이 부족하고 유관기관 간 금융안정 정책 조율체계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관련 기술과 법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다른 나라의 CBDC 추진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국내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새 경제통계시스템(신ECOS)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될 ‘디지털혁신실’을 중심으로 시급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새로운 연구기법의 적용방안을 심층연구할 예정이다.

부총재보를 최고 디지털 혁신 책임자(CDSO·Chief Digital Strategy Office)로 하고, 전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의 실무부서가 디지털혁신실이다.

또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특별연구원 제도’와 ‘조사연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통화정책체계 개선, 당행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무역 질서 변화, 전염병 대유행, 국내외 금융시장 연계성 강화 등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사연구 역량을 확충한다. 특별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심층 연구역량을 전략적으로 확충·육성하고, 경제연구원 등의 기존 우수 연구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 조직 차원의 조사연구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신설되는 조사연구위원회는 한은 조사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정책중요도를 반영해 중점 조사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연구 과제의 수행과정 일체를 총괄하게 된다. 한은 조사연구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4~5급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가 보완된다.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이번 BOK 203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인사 측면에서의 제도 마련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BOK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담당 부총재보가 실행을 총괄해 세부실행계획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총재가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BOK 2030의 추진을 통해 직원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내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역량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와 디지털 혁신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 반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企 세무조사 대폭 축소… 간편조사 확대”

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적극수용”

중소기업계가 국세청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가능한 한 코로나19가 끝날때까지 중지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헤쳐나가면서도 성실납세로



김현준(가운데) 국세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모든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로 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청장과 김 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와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건의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한다. 세무조사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다”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달 만기채권 65조… 변동성 적극대응”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65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6월의 경우 기업의 월말 결제자금 수요는 커지는 반면 금융회사는 분기말 건전성 관리에 나설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약 12조원이며,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약 53조원이다.

손 부위원장은 “상당부분이 고신용 등급(장기채 AA-이상, 단기 A1)으로서 최근 개선된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회사채 발행, 차환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 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시장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마련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P-CBO)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5조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해 뒀고, 필요시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건설하지만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하락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산은의 채권매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매입기구(SPV)도 운영할 예정인 만큼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경우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완화되면서 유동성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는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927억원이 집행됐다. /양상미 기자 smahn1@

軍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 받는다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법률 공포

올해 12월부터 군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6개월 뒤 시행되는 이번 개정 법률에

는 군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3월부터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군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한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변호사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

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m@